

◆ (정책동향) ①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

- ▷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총 20,839건, 8,545억원으로 조사되어 최근 5년 동안 최다 피해액을 기록
- ▷ 정부는 3.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

◆ (지역동향) ② (전 국)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찬반 갈등 ③ (경 기) 전투기 오폭 사고 대응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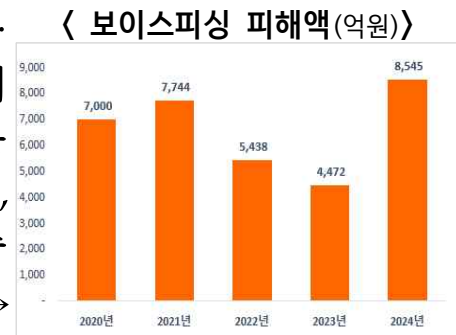
1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

□ 감소 추세였던 보이스피싱은 다시 증가세

- '24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총 20,839건, 8,545억원으로,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10.2%, 피해액은 91.0% 증가

- 그간,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, 통신·금융분야 방지대책, 일반시민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결과, 보이스피싱은 '21년 이후 3년동안 꾸준히 감소했으나, '24년 들어 피해 건수*와 피해액이 급증

* ('20)31,681건 → ('21)30,982건 → ('22)21,832건 → ('23)18,902건 → ('24)20,839건



출처: 경찰청

- 최근, '카드배송원' 사칭 시나리오* 유행과 예방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교묘해진 수법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 중

* ① 배송원 사칭범이 카드가 배송됐다고 전화 → ② 가짜 콜센터로 전화 유도 → ③ 가짜 콜센터에서 원격제어앱 설치 유도 → ④ 앱 설치로 금감원·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 → ⑤ 금감원·검찰 사칭을 통해 자금 이체 유도

- 특히, 저금리 대환대출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대출빙자형* ('23년7,588건 → '24년11,320건)이 증가했으며, 기관사칭형은 보유재산이 많은 50대 이상에게 피해('23년32% → '24년48%)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

*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수수료를 요구

- 아울러, 상호금융권(농협·신협·새마을금고 등)의 '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*은 1,201억원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하여 전체 피해액의 31.6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, 보안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

* 피해액(전체대비) : ('22)255억(17.6%) → ('23)409억(20.8%) → ('24)1,201억(31.6%)

□ 정부는 대대적인 특별단속 등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

- 정부(경찰청)는 3.6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과기부·방통위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
 - 경찰청은 대대적 특별단속을 통해 콜센터·자금세탁조직 검거에 집중,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중국·동남아 등 범죄조직 단속 확대, 피해차단 노력과 긴급생활비 등 피해자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
- 과기부는 대포폰 차단을 위한 통신사 본인확인 강화 조치와 함께, 범죄에 사용된 전화·문자 회선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, 방통위는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량문자 자격을 개선
 - 금융위는 금융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, 상호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 인프라와 인원을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를 추진

□ 자치단체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

- 서울시는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노인·1인가구(23년~)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, '24.10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추진
- 대전시는 '23.9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강사 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, '24.7월 市 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중부경찰서는 문화적 차이로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·마약 범죄 예방교육 실시
- 울산시는 '24.8월부터 울산지검·울산경찰청·울산권 택시조합과 협력하여 택시에 탑승한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대상 안내문 배포 및 택시에 보이스피싱 경고스티커를 부착
- 경기도는 '24.9~12월 '道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(21년 제정)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도민(1,195명) 실태조사*를 첫 실시, 피해 유형·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
 - * 총 피해액 96억원, 1인당 평균 피해액 810만원, 기관사칭 유형이 최대(36.1%)
-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남교육청·경찰청·소비자연맹·대한노인회 등과 연계, 퇴직경찰관을 제2금융권 중심 순찰활동에 투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금융범죄예방관 사업(천안·공주·당진·금산)을 추진
-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돕는 '행복선생님' 사업과 연계, '23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노인을 발견하면 '행복선생님'이 경찰·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·인계하는 어르신 지킴이 사업을 추진

2 전 국(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찬반 갈등)

- 최근 온라인 비중이 늘어난 유통시장 구조 반영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, 대구시가 처음('23년)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한 이후로 휴업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
 - ※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4%가 휴업일 평일 전환 조례 도입
-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이며, 산업연구원에서는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.1% 증가했다고 분석하는 등 상권 활성화가 확인됐다는 의견도 존재
- 반면, 노동계에서는 마트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,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
 - 서울 관악구는 최근 市 자치구 중 4번째로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, 마트 노조는 이를 규탄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
 - 경남 진주시가 지난달 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마트 노조는 강경 투쟁에 들어갔고, 앞서 김해시에서도 전환을 검토했으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휴업일 전환 논의를 중단
-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오프라인 유통업계 등의 휴업일 전환 의견과 노동계의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

3 경 기(전투기 오폭 사고 대응 동향)

- 지난 3.6일, 경기 포천시에서 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로 24명(민간인 부상)의 인명 및 166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(3.11일 기준)
- 정부(행안부)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(3.7일)하고,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해 3.8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
- 경기도는 포천시·軍과 함께 피해 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, 피해가 심각한 30가구에는 별도 주거를 제공 중으로, 입원 환자 전담 공무원 매칭, 재난심리 회복지원 부스 등도 운영
- 포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가동, 주민 피해 접수처 운영, △임시 주거 및 구호물품 지원 등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, 예비비를 투입해 기반시설 응급 복구를 완료
- 한편, 군사 훈련장이 산재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,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
 - ※ 경기도 내 전체 사격장 380여곳 중 85%(320여곳)가 경기 북부에 집중
- 포천시는 대규모 군사 훈련장이 밀집해 주민 안전과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, 포천 내 훈련장 3곳의 통·폐합 논의를 촉구
- 연천군은 軍에 피해 발생 대비책과 관련 매뉴얼을 요구했고, 양평군은 도비탄(跳飛彈) 사고를 우려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할 예정

참 고

시·도지사 주요 일정(3.12)

시·도	시 간	내 용
서 울	-	· 청내근무
부 산	-	· 청내근무
대 구	-	· 청내근무
인 천	-	· 청내근무
광 주	10:00 14:00	· 5·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출범 · 동남아 수출활성화 간담회
대 전	15:00	·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
울 산	10:00 15:00	· 市의회 제254회 임시회 · 서울주소방서 준공식
세 종	16:00	· 市-원건설 MOU
경 기	-	· 청내근무
강 원	10:00 12:40	· 道의회 제335회 임시회 ·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 희망 콘서트
충 북	14:00	· 道의회 제424회 임시회
충 남	-	· 청내근무
전 북	13:30	· 제3회 전북새만금혁신 심포지엄
전 남	-	· 청내근무
경 북	-	· 청내근무
경 남	10:00	· 道의회 제421회 임시회
제 주	10:00	· 제주관광대학교 재학생 대상 특강